

W:WOOSUNG

2023년 11월

주간 축산 이슈 뉴스클리핑

11월 4주차 HOT ISSUE

- “폐사·유량감소 잇따라”...럼피스킨 백신이 두려운 낙농가들
- 새끼 돼지 초기 성장 관여하는 장내 미생물 밝혀

“폐사·유량감소 잇따라”... 럼피스킨 백신이 두려운 낙농가들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에 이어 럼피스킨 백신 접종이 이어진 가운데 일선 소 사육 농가에서 유·사산과 폐사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낙농가들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유량감소와 유질하락 등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1종 가축전염병이어서 백신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농가가 입는 경제적 피해가 크다’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세종시 소재 한 낙농가는 럼피스킨 백신 접종 후 2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 농가에 따르면 9월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후 10월 일제접종기간에 또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다. 여기에 더해 럼피스킨이 발병하면서 10월 30일 럼피스킨 백신을 추가로 접종했다. 9~10월 사이 3차례 백신 접종이 이뤄진 것.

이 과정에서 2마리가 폐사한 것인데 익명을 요구한 이 농가는 “한·육우와는 달리 유우는 젖을 생산하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데 연이어 3차례에 걸쳐 백신을 접종하다보니 스트레스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백신 접종에 따른 폐사로 인정되면 가축비는 정부가 보상을 해주지만 한·육우와는 달리 유우의 사육목적이 우유를 생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큰데 이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 농가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백신 스트레스로 인해 2주가량 유량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기간 체세포수도 급증해 원유정산가격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9월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는데 다시 10월에 백신을 접종하라는 걸 이해하기 어려웠다. 상황이 이렇게 계속 유지된다면 낙농가들이 백신접종을 기피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이어 백신을 3차례나 접종한 데 대해 세종시청 관계자는 “농장 전체 소의 항체가를 올리기 위해서 9월에 농장 사정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개체라도 10월 일제접종 당시 9월 접종개체의 일제백신 접종일과의 시차가 4주를 넘길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하도록 돼 있고, 4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에도 백신 접종 후 개체 발열과 유량 감소 및 유질 하락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백신 스트레스로 인한 유량 감소와 유질 하락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면서 “통계적으로도 원유생산량이 상당 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에 럼피스킨 살처분 지원금 신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농가의 생계 안정을 위한 보상금 항목이 신설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국회 농해수위 최춘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이날 소위원회 결과 보고를 통해 “지난 10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예산안 및 기금운용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조793억원을 증액하고 128억원을 감액해 총 1조665억원을 순증했다”며 “무기질 비료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예산에 576억 8천100만원을 증액했고, 면세유 가격 및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농업용 면세유 인상액 차액 지원에 653억7천2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축산분야 역시 “럼피스킨 발생으로 사육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생계 안정 및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한 보상금 지원 등 살처분 보상금 사업 예산 358억4천5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연례적 집행 부진이 이뤄지고 있는 곤충 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은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42억5천만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농진청, 메탄저감제 등록 심의기준 신설 · 시행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메탄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에 따라 메탄저감제의 신규 등록, 실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 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신설 · 시행한다.

메탄저감제는 단미사료, 보조사료로 설정된 물질 중 가축 장내발효로 발생하는 메탄을 10% 이상 감축시킬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하며 호흡 대사 챔버나 후드식 메탄 측정 장치를 활용해 실험한 지정 실험기관의 동물 사양실험 결과 등을 검토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의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 기관은 전문 인력과 실험시설 확보 현황, 실험 능력 등을 평가해 지정하게 된다. 메탄저감제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실험기관에서 자사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의 동물 사양실험을 수행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실험능력 유지를 위해 농진청이 지속해서 관리 · 감독을 받게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정현정 동물영양생리과장은 “이번 사료공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 시행을 통해 국내 사료산업과 연관 산업이 활성화되고 메탄저감제 등록이 조속히 이뤄져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4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저메탄사료와 그 인정에 관한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새로 도입된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을 11월까지 끝내고 12월부터 메탄저감제 심의등록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한우 마릿수, 충남·경북서 가장 많이 줄어

한우 사육 마릿수가 전남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줄어든 가운데 충남과 경북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한우협회의 10월 기준 지역별 지난해 대비 한우 사육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우 사육 마릿수는 지난해보다 4만5000마리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우 사육마릿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충남도로 1만4657마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9213마리가 줄어들며 두 번째로 사육 마릿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와 충북도도 각각 7000마리 이상의 한우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남도는 6329마리의 한우가 늘어났고 제주도로도 1007마리의 한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농가를 제외하고 사육규모를 유지·감소시킨 농가 비중은 전체의 56.3%였고 증가시킨 농가 비중은 43.7%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우협회의 한 관계자는 “생산비 상승 등으로 감축을 많이 해서 전 지역이 고르게 한우 사육마릿수가 줄어든 것 같다”며 “고령농의 경우 한우가격이 좋지 못해 폐업을 한 농가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지역이 고르게 한우 마릿수가 줄어든 가운데 전남도에서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한우 번식우 농가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전남도의 한 한우농가는 “전남도에서 한우 사육 마릿수가 늘어난 것은 전남도에는 소규모 번식 농가들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송아지 생산을 꾸준히 하기 때문”이라며 “타지역에서도 전남도의 송아지를 많이 구입해가고 지역내에서도 송아지를 쉽게 구할 수 있어 비육하는 농가들이 많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우즈베키스탄에 ‘K-낙농’ 수출

한국형 젖소 수정란과 수정란 이식 기술, 동물약품을 묶음(패키지)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하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몇 달간 수정란 준비, 검역 협상, 통관, 대리모 가축 준비 등 준비 단계를 거쳐 지난달 20일 우즈베키스탄에 ‘케이(K)-낙농 묶음’ 첫 수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수출은 국내의 선진 축산기술을 우즈베키스탄에 전수하고, 한국형 젖소 번식 관련 국내 기자재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 향후 2028년까지 약 158억 원에 달하는 낙농 전후방사업 수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를 기념해 지난달 19~20일까지 이틀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수정란 제작업체와 학술토론회를 열고, 대리모 가축에게 직접 수정란을 이식하는 행사와 젖소 사양 관련 국내 기자재도 선보였다.

농촌진흥청은 정부의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 보유한 우수한 낙농 기술과 국내 후방산업(유전자원, 사료, 동물약품 등)을 묶어 수출하는 ‘케이(K)-낙농 기술 수출 사업’을 우즈베키스탄에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위태석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장은 “이번 젖소 수정란 수출은 농촌진흥청과 민간 협력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통해 한국형 낙농 기술을 세계로 알리고 신 시장을 개척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진흥청 코피아(KOPPIA,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우즈베키스탄센터는 이번 수출에 앞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특별 검역 협상을 체결하고, 국내 수정란 제작업체가 우즈베키스탄에 젖소 수정란을 처음 수출할 수 있게 지원했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축산연구소와 ‘젖소 산유량 증대를 위한 번식·사양기술 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끼 돼지 초기 성장 관여하는 장내 미생물 밝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지난 14일 새끼 돼지(자돈)의 분변에서 추출한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성장 능력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미생물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은 돼지의 창자(장관)에 공생하면서 창자 안의 면역세포 발달과 난소 화성 섬유질을 분해해 돼지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와 관련 농진청 연구진은 하루 동안 늘어난 몸무게(일당 증체량)가 많이 나가는 새끼 돼지 집단과 적게 나가는 집단을 대상으로 각 집단 분변에서 나타나는 미생물과 새끼 돼지 성장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몸무게 증가 비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상대적 풍부도가 유의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25개 미생물을 발굴했다.

몸무게 증가율이 높은 집단에서 발굴한 미생물 가운데 상대적 풍부도가 높았던 마빈브리안티아(Marvinbryantia), 무리바쿨라세아(Muribaculaceae), 코프로코쿠스(Coprococcus)는 돼지가 식물의 다당류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게끔 크기가 작은 지방산으로 분해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농진청은 이번에 발굴한 미생물을 활용해 체중 증가율이 높은 새끼 돼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돼지의 초기 성장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료첨가제 소재 개발 등 우리나라 양돈의 생산성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양돈, 베트남 ASF 재발



최근 비슷한 시기에 베트남 여러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보고되면서 베트남 정부가 양돈농가에 차단방역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11월 14일 Dong Xoai시는 Tan Binh지역 양돈농가에서 ASF 양성이 판정되면서 반경 3km 지역에 대해 ASF 확산 위험지역으로 설정했다.

Dong Xoai시는 올 초부터 지금까지 주로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ASF가 발생했으나, 약 200만 두 이상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어 ASF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11월 11일에는 Trieu Phong지역과 Qunag Tri지역에서 ASF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돼지 127두가 살처분됐다.

특히 해당 지역 양돈업 종사자들의 미흡한 차단방역과 ASF 의심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확산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0월 말 발생한 홍수로 인해 돼지가 폐사하면서 농가에서 폐사체를 무단으로 투기하면서 ASF 재발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지만, 베트남은 오는 2024년 설날을 맞아 돼지고기 물량이 폭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축 물량을 늘리기 위해 사육두수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ASF 확산 위험이 높은 지금 양돈농가는 ASF 의심증상 개체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과 의심증상 돼지에 대해 도살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MSY 20두 되면 모돈 수 10% 감소



정부의 양돈 규제 정책으로 향후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시 자연스럽게 전체 모돈 두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국내 평균 MSY 20두로 향상을 가정한다면 국내 모돈은 현재 100만마리서 91만 마리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연구 보고서 '식량 공급 체계 개선 및 자급 목표 설정에 대한 연구'에 실린 내용 중 양돈의 경우 MSY가 향상되면 동일한 수준의 돼지고기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돈 마릿수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돼지고기 공급량(국내 돼지 도축 마릿수)을 기준으로 MSY가 향상됐을 때 필요한 모돈 마릿수를 계산할 결과 MSY가 20마리로 향상될 경우 10만 마리의 모돈을 감축할 수 있다고 산출했다. 또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25마리로 향상될 경우 모돈 감축 두수는 29만 마리, 네덜란드와 비슷한 수준인 30마리로 향상될 경우 41만 마리의 모돈을 감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현재 모돈 수 100만마리서 국내 평균 MSY가 전반적으로 향상될 경우 현재보다 최대 40%(61만1천두)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모돈 수 감소에도 출하물량이 늘어난 배경에는 농가들의 MSY 향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한돈혁신센터 역시 MSY 30두에 육박하는 생산성을 기록하면서 현재 상시 모돈 두수는 올해 10월 기준 235두로 3년전 한돈혁신센터 첫 입식 당시 303두 대비 약 30% 감소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이 최근 다산 모돈 보급 및 시설 개선을 바탕으로 전국 평균 MSY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규 및 증축은 여전히 제한돼 있어 전국 모돈 수 감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가운데 모돈 수 감축으로 인한 사료량 및 동물약품, 그리고 후보돈 판매 감소 등 관련업계에도 그 파장이 미칠 수 있다.

“오리 사육제한, 해도 너무해”...원성 빗발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에 따르면 이번 겨울, 고병원성 AI 차단을 목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가 사육 제한을 시행한 농가가 전국 약 310호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육제한 시행 농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른 농가는 164호이지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시행하는 농가들이 150호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AI 발생위험도 등을 감안, 지자체가 추가로 사육제한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 오리 사육제한을 처음 시행했던 2017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자 현재 전 업종 기준(통계청)으로 전국에서 육용오리를 사육 중인 농가 784호의 41%에 해당하는 농가들이 사육을 못하고 있다

매년 겨울마다 사육제한과 별도로 ▲AI 발생지역 반경 10km(직경 20km)내 입식 금지 ▲연중 일제 입식 및 출하 의무화 ▲AI 특별방역대책기간 및 AI 발생 시기 육용오리 출하 후 입식 제한 기간 최소 14일 준수 의무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오리고기 유통량이 반 토막 난 지가 이미 오래된 상황에서 더 이 같은 일방적인 방역 조치는 산업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이 오리업계의 입장이다.

오리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자체적인 추가 사육제한 외 농식품부의 지침에 따른 사육제한은 지침 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육제한 명령서를 발부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도 명령서를 받은 오리농가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지금도 오리의 입식이 가능한 상황.

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지만, 현재 AI 발생상황이 아닌데도 미리 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법조문에 위배된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